

여야 정치권, 때아닌 '지구당 부활론' 급부상

국힘 윤상현, 개정안 발의 민주당도 내부 검토 등 착수 당원 소통·권한 강화 내세워 부패정치 재현 우려 목소리도

여야 정치권에서 2004년 폐지된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지구당 부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당원 소통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데, 부패정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며 지구당 부활론을 띄우고 있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내부 검토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사실상 모든 정당의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합법조직이 아니라서 유사 선거조직, 사전선거 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당원과 만남에서 "지구당 부활도 과제"라며 부활론에 힘을 싣고 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영배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로 당원 권한 강화를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구당을 수도권 지역 등 조직 재화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속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과거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정치부패의 심화를 부추겼다.

이른바 차떼기(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과거의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윤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한 전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언급에 대해 "단순히 원외위원장이 좋아한다고 이걸 한 건지 논리적인 토론 같은 게 필요한 주제"라며 "이거 하면 앞으로 지역 유지와 유착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3행 3無' 광주시, 청렴시책 확 달라진다

'공정·소통·배려' 시책 추진

광주시가 청렴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존중과 배려,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을 위해 익명성 보장 채팅방 개설, 청렴시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 개설 등 이전과는 확 달라진 청렴시책 추진으로 내실화를 다진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고광원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 간부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를 개최했다.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는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협의체로,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3행(공정·소통·배려) 3무(부패·정탁·갑질)' 실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는 반부패·청렴 기반 구축, 청렴·공정 내재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3개 중점분야와 27개의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청렴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 이출연하는 '공정이 청렴이다' 주제의 동영상 제작 △간부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중요한 건 청렴한 마음' 편지 공유 △신고자의 익명 보장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열목어가 사는 세상' 개설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콘텐츠 '영화가 좋다', 판소리 '신(新)별주부전' 등 도입 △외부고객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감사위원장의 찾아가는 현장소통방' 운영 등 새로운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를 정례화해 소통·배려하는 행복한 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복한 도민 정책 제안"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제9기 전남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에 나선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국정 및 도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활동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단체다.

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대표 박문수) 105명은 지난해 3월 선발돼 총 1451

건의 정책제안 및 정책현장 참여 76회, 나눔 봉사활동 108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담양 호텔도몽드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참여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제안 능력 향상 기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미 활동자 해임으로 대체 선발된 신규 참여단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대비한 토의도 진행했다. 오지현 기자

12월27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오는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공무원증,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2월26

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2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 개정 추진

'이재명 대표 연임 염두'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당 대표 등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의 개정을 추진한다.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당 지도부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개정 이유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당 대표 선거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무공천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본격화'

목포 대양산단 수출단지 착공식 지상 5층 규모... 내년 준공 목표

전남도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 품질인증, 연구개발(R&D), 수출까지 지원하는 수출 전진 기지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30일 목포 대양산단에서 김영록 도지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박홍률 목포시장과 유관기관, 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식품 수출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상 5층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총 11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5년을 준공 목표로 한다.

해당 단지는 수산식품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 마른김 거래소, 연구개발시설, 냉동·물류창고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은 2년 연속 30억달러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도는 김 2억2000만달러, 전복 5000만달러 등 총 3억7000만달러 수출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준공을 통해 전남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가공 및 수출 체계 구축으로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대형 가공공장의 경우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다양한 크기의 가공공장 36개소가 구축되는 만큼 업체 규모와 생산 가공품에 따라 임대 가능하다.

R&D 연구센터를 통해 가공식품 공동 개발, 성분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제품

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는 마른김 구매를 위해 국내외 바이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운영한다. 현재 일부 수협에서 운영 중인 마른김 품질관리(등급제)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품질관리 운영규정을 마련 중인 만큼 국제적인 김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남이 김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지사는 착공식에서 "전남은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액 1위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통해 전남 수산식품을 고차 가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돈 버는 어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